

정책참고자료

2018-11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과 혁신성장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다

- 열린 토론으로 함께 혁신성장을 그리는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정책과정' -

4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강원 고성군 기업인과 현장 소통 가져

- 28일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로 남북경협 핵심거점인 고성군 관광산업 활력 모색 -

8

3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창업의 산실「오픈스퀘어-D 강원」 문 열다

- 지역 거점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오픈스퀘어-D」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內 개소 -

10

4 교육부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 3년간 80억 원 지원, 지역시설 활용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

15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700억원 규모 특구펀드 조성

- 제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3차-3호 연구개발특구펀드) 결성 -

21

6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속 인문 확산을 위한 지역 인문 활동가 모집

- 전국 지역 문화기반시설 65곳 선정, 인문 전공자 130명 인문 활동 지원 -

25

7 농림축산식품부

- 신성장 곤충산업, 사육농가 '15년 대비 3배 성장' ————— 27
- 2017 곤충·양잠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8 환경부

- 수도권대기환경청, 생활밀착형 대기환경개선 사업 공모 ————— 31
- 수도권 내 민간단체 대상으로 대기개선 활동 사업 공모, 우수과제 최대 5개 선정하여 사업지원금 총 2,100만 원 지원 -

9 고용노동부

-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 ————— 34
APEC 청년고용증진 포럼 개최

10 여성가족부

- '여성의 경력단절, 해결방안을 찾습니다.' ————— 36
- 여성 경력잇기 문화 정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11 국토교통부

- 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 ————— 39
-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기반시설 46종으로 개편-

12 해양수산부

- 어촌 재생·해양관광 활성화로 어촌 혁신성장 이끈다 ————— 42
- 해수부, 「어촌뉴딜 300」추진 계획 발표... 어촌의 지속발전 도모 -

1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과 혁신성장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다

- 열린 토론으로 함께 혁신성장을 그리는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정책과정' -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 이하 자치인재원)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정책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 지자체 4급 이하 정부혁신 담당 공무원 6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정부혁신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특강과 부처별 정책설명, 우수사례 공유와 열린 토론으로 진행된다.
- ☐ 이번 과정은 민선 7기 출범시기에 맞춰, 새로운 출발 단계에 있는 지자체에게 정부혁신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협업하여 개설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17일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경제 도약을 위해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고 당부한 바 있으며, 혁신의 주체로서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필요성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 ☐ 이에 따라, 자치인재원은 올해 네 번째 시책교육으로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정책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정부혁신이 지방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주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누리고, 혁신성장은 다시 정부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하고자 한다.
- 특강으로는 김성진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이 참석해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의하며, 부처별 정책 설명으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 대표적인 혁신성장 추진 부처가

관련 정책을 설명한다.

-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는 **한훈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이 참석하여 ‘혁신성장 및 규제혁신 방안’을 소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대표적 혁신성장 사업인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와 지자체 혁신과제 담당자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성과창출 방안**을 서로 공유한다.

- 아울러, 전북 완주군·경기 시흥시·충남 부여군 등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및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지자체의 정책성과**를 공유하여 참여 교육생의 이해를 돕고, **열린 토론**을 통해 현장에서 **혁신성장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는 시간도 갖는다.

전북 완주군	청년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이 중심되어 해결방안 모색한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
경기 시흥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복원한 ‘동네관리소’
충남 부여군 (우듬지팜)	스마트 온실을 신축해 연간 476t 정도의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17년 모태펀드 및 스마트팜 단지사업 유치해 20ha 이상으로 규모화

- **박병호 자치인재원장**은 “이번 교육에 참여한 지자체 실무자들이 정부혁신과 혁신성장 관련 정책과 우수사례를 접하여 **지역현장에서 관련 과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치인재원은 정부혁신과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 교육을 통해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참고 1 우수사례 주요 내용

분야	지자체	주요 내용
사회적 가치 구현	경기 시흥시 (공동체 복원)	○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동네관리소* 설치·운영’을 통해 잃어버린 공동체적 가치를 복원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유도 * 저소득가구 대상 집 수리, 무료 공구 대여, 무인택배 등 주민 스스로 가꾸는 마을관리와 주거복지 터전 ○ (혁신 아이디어) - 주택밀집지역의 유휴 공간, 폐가 또는 공가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 동네를 변화시키고 지역의 공적문제 해결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냄 ○ (성과) 일반주택지역 동네관리소 운영(11개소), 마을일자리 창출(주민코디 11명, 마을돌보미 55명, 운영진 165명)
	전북 완주군 (시민참여)	○ 청년완주 JUMP프로젝트*는 청년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의 참여 활성화, 농촌지역의 고령화, 과소화 등 지역의 문제를 청년이 중심되어 해결방안 모색 * 청년! 완주에서 놀고 먹고, 완주에서 살자 ○ (혁신 아이디어 및 성과) - 청년참여 10% 할당제 확대 추진 (축제 분야→위원회, 보조금 사업 등 분야로 확대) - 청년 참여예산제 점진적 확대(2억원→3억원) - 청년 사회적경제 복합단지(클러스터) 조성
혁신성장	충남 부여군 (우듬지팜)	○ 농식품 모태펀드 유치금(60억원)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조성 추진('17년~, 20ha) - '16년 2.3ha 규모의 스마트 온실 신축 → 연간 476t 정도의 파프리카 재배 ○ 축적된 작물 생육환경 빅데이터를 관련 연구기관 등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과력적 영농의 핵심인 데이터 수집과 활용 부문에도 크게 기여 ○ 160여개 회원 농가, 인근 농가 연합 등으로부터 농산물을 출하 받아 대량의 농산물을 수집·선별·포장해 이랜드, 롯데마트 등으로 연계하여 판로확보(연매출 117억원 달성) - 방울토마토에서 파프리카, 딸기, 멜론 등으로 재배 작목 확대

참고 2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정책과정」 운영

□ 설계 과정

- 5대 국정지표 중 네 번째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지표를 정책기획위원회, 기재부 등과 협업, 민선 7기 지자체 출범 시기에 맞춰 지역 현안 해결 및 성과창출 지원 등을 위해 **맞춤형으로 개설**
-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는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해 **정부혁신 정책 공유 및 실행방안 모색 필요**

□ 교육과정 개요

- 교육대상 : 지방 4급 이하 공무원
- 기간/ 인원 : 3일(6.25.~6.27.) / 60여명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정책과정’ 주요 내용

◇ 위원회·B.H. 특강

- (정책기획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정부혁신(최현선 국민주권분과 위원)
- (B.H. 사회혁신비서관) 정부혁신의 필요성

◇ 부처별 정책 설명

정부 혁신	행안부	· 정부혁신 추진 방안
		· 지자체 합동평가제도 혁신방안
		· 공기업 채용비리 적발 사례 및 예방대책
혁신 성장	기재부	· 내 삶을 바꾸는 혁신성장 및 규제혁신 추진 방안
	농식품부	· 스마트팜 확산 방안
	행안부	· 공공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 우수사례 공유

- (사회적 가치 구현) 마을공동체 분야 (경기 시흥), 시민참여 분야 (전북 완주)
- (혁신성장) 스마트팜 기술 적용 및 운영 원리 (충남 부여, 우듬지팜)

◇ 열린 토론 및 발표 : 정부혁신 실천 방안 모색 및 토론 결과 발표

※ 5대 국정과제 설계 동향

- 국정지표별 소관 위원회*와 협업, 맞춤형 **심화과정** 마련
*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8개
- 주기별 실무자 중심 교육 : ①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정책과정(3월), ②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정책과정(4월), ③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과정(5월), ④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정책과정(6월), 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정책과정(11월)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강원 고성군 기업인과 현장 소통 가져

- 28일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로 남북경협 핵심거점인 고성군 관광산업 활력 모색 -

-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의 핵심거점지역인 강원도 고성군에서 기업의 고충과 애로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8일 남북경협의 핵심거점지역인 강원도 고성군 기업인과 관광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친기업환경 조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는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기업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 풀어줌으로써 기업성장 기반위에 일자리가 생겨나는 선 순환적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이번 현장회의는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소관 분야별 전문 상담인력이 함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제기된 기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 가능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그 외의 민원사항은 기업고충 민원으로 접수하여 최대한 기일 내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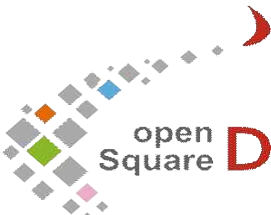
방침이다.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남북 경제협력 분위기 속에 남북 경협 주요 거점지역인 강원도 고성군에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많은 지역에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창업의 산실 「오픈스퀘어-D 강원」 문 열다

- 지역 거점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오픈스퀘어-D」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內 개소 -



< 오픈스퀘어-D 입주기업 성공사례 >

- **싱가포르 진출 성공, 스타 의료관광 플랫폼, '유노고'**
 '유노고 코리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방하는 병의원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내 병원정보와 개인 맞춤형 병원을 알려주는 '유노고'를 개발했다. 서울 오픈스퀘어-D 1기(16)로 입주해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을 받은 '유노고 코리아'는 작년 회원 수 7만 명을 돌파하고, 싱가포르 투자 유치 성공에 이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 **세계은행(World Bank) 글로벌 파트너로 도약한 '지속가능발전소'**
 '지속가능발전소'는 환경·고용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비재무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후즈굿' 서비스를 개발했다. 서울 오픈스퀘어-D에 2기(16)로 입주하여 전방위적인 해외 진출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진출에 성공한 이후, 세계은행(World Bank)의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국내 최초로 전 세계 투자기관에 매일 기업 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 **부산 거점 스타트업에서 스타 기업으로 부상한 '니더'**
 실시간 단기 인력 매칭 서비스 '급구'를 운영 중인 니더는 최저 시급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에게 단기간 근무가 가능한 인력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경력에 맞는 단기 업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부산 오픈스퀘어-D(17)에 입주해 있고 부산시 일자리 및 소상공인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오픈스퀘어-D 입주 후 전문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주)롯데액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현재 회원수 13만 명을 돌파하였고, 11억 원의 이윤을 창출해 내고 있다.

[오픈스퀘어-D CI]

- ▶ **open Square D** :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모이는 열린 공간으로 데이터(Data), 꿈(Dream), 디자인(Design) 등을 의미
- ▶ **네모와 부메랑 문양** : 수많은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고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

- 서울, 부산에 이어 강원 춘천에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시설이 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춘천을 중심으로 강원 일대의 공공데이터 기업 창업 및 일자리·경제창출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7일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강원 춘천) 내 공공데이터 창업

지원 종합공간「오픈스퀘어-D 강원」을 개소했다.

- “오픈스퀘어-D”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이는 열린 공간이자,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와 창업까지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강원에도 세 번째로 설치되었다.

< 오픈스퀘어-D >

- ◇ (개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창업 단계별 종합 지원 프로그램 제공
- ◇ (현황) 서울(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16.1), 부산(해운대 센텀기술창업타운, '17.4) 2개소 운영 중

- 강원도는 작년 12월 「데이터 퍼스트(DATA FIRST)」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새로운 미래 산업 육성의 최우선 순위를 데이터에 두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특히 강원도에는 네이버·더존비즈온 등 민간데이터 센터가 입지해 있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 이에 공공데이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창업 진흥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가 협업하여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오픈스퀘어-D」를 설치하고, 공공·민간데이터의 융·복합 촉진,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오픈스퀘어-D 강원」은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2층, 165㎡ 규모 공간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하는 협업·교류 공간과 8실의 기업 입주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입주공간·데이터 제공, 교육·컨설팅, 투자유치 등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받게 된다.
- 특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에서 창업 지원을 선도해 온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프로그램과 오픈스퀘어-D의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데이터 기업인 등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생 및 기업인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 및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초기 시장 개척의 어려움, 필요한 공공데이터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 이에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강원도·한국정보화진흥원·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은 공공데이터 교육, 컨설팅, 지재권화, 자금·투자 유치, 공공데이터 제공 등 체계적인 창업과 사업화 지원을 약속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오픈데이터포럼(운영위원장 윤종수), 강원빅데이터 신산업포럼(공동위원장 한중호, 나득균)과 함께 지역 중심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개발자·학계·기업·언론·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 개소식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강원 지역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오픈스퀘어-D를 개소하게 된 것은 공공데이터가 지역 거점 창업의 핵심원천으로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라며 “공공데이터가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혁신 창업이 봄을 이룰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오픈스퀘어-D 강원」 설치 개요

□ 추진배경

-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창업까지 연결되는 종합지원공간 마련으로 데이터 기반 창업 및 혁신성장 기반 조성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역 확산을 위해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지역 거점 '강원 오픈스퀘어-D'를 설치하고 혁신창업 지원을 확대

< 오픈스퀘어-D >

- ◇ (개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창업 단계별 종합 지원 프로그램 제공
- ◇ (현황) 서울(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16.1.)-부산(해운대 센텀기술창업타운, '17.4.) 2개소 운영 중

□ 「오픈스퀘어-D 강원」 설치 개요

- (장소)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층)
- (설치규모) 1개층 약 50평
- (공간구성) 협업공간(1실), 기업 입주공간(8실), 회의공간(1실)

< 오픈스퀘어-D 강원 >



<「오픈스퀘어-D 강원」 협업공간>



<공간 배치도(2F)>

□ 운영 계획

○ 기본방향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빅데이터·인공지능(AI) 지원 프로그램 등 창업 지원·육성 기능과 오픈스퀘어-D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기능 협업
- 데이터 기업 발굴, 입주공간 제공 및 사업화 지원 등 기업 성장지원
- (운영 프로그램) 교육, 네트워킹, 컨설팅, 입주공간 제공 등 창업 지원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프로그램 + 오픈스퀘어-D 프로그램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프로그램>

기업 발굴	커뮤니티·멘토링	입주·보육
■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Big Data Idea Factory : BIGTORY) ■ 공모전 ■ 강원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 DSI) 프로젝트	■ 강원 빅데이터 신산업포럼 ■ 신기술 멘토링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 원스톱(One-Stop) 컨설팅 ■ 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 투자설명회(IR) 및 데모데이

<오픈스퀘어-D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컨설팅
■ 교육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실습 및 분석 교육(초급·중급)
■ 네트워킹 지원	데이터 커넥션데이(네트워킹) 지원
■ 투자유치 지원	오픈스퀘어-D 투자설명회(IR)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 3년간 80억 원 지원, 지역시설 활용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관계부처(복지부, 행안부, 여가부)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원 지역으로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총 9개 지역)를 선정하였다 ☞ [붙임 1] 참조

- 선정 지역에 3년간('18~'20) 총 80억 원*을 차등지원하며,
 - * 교육부 특별교부금 65억 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
- 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를 모범사례(Best Practices)로 발전시켜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예정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18.4.4., 서울 경동초) 이후, 정부는 범정부 공동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확정('18.4.19.)하였다.

-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복지부 차관(공동단장), 행안부·여가부 실장, 지자체 부단체장·교육청 부교육감(세종·경기) 등 총 8명으로 구성·운영('17. 9월~)
- 이후, 제4차 추진단 회의(6.26.)를 개최하여 선정평가단*의 서면·대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모델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9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 추진단 자문위원 및 학계, 연구원 등 관계부처 추천 등 7인으로 구성

※ 사업공고(5.4.) → 사업설명회(5.8.) → 사업계획서 접수(~5.30.) → 선정평가(~6.19.)

< 지역 자원 활용한 돌봄 서비스 모델안(예시) >

- ▶ (도시형A) 아파트 단지 내 시설, 주민 센터, 도서관 등 지역 공공시설 활용
- ▶ (도시형B) 지자체-학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교실을 활용한 돌봄시설 설치·운영
- ▶ (도농복합형) 읍면지역은 학교시설을, 신도시는 아파트 등 마을공간을 활용

- 아울러 정부는 선도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이번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다함께 돌봄' 센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17개 광역지자체는 2019년부터 대폭 확대 운영되는 '다함께 돌봄' 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4개년 추진계획('19년~'22년)을 수립할 예정

- 앞으로 추진단은 수요자(아동) 중심의 질 높고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 지역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 선정된 지자체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초등학생의 돌봄 수요를 유형별*로 촘촘하게 조사하고 돌봄 공급계획을 수립·조정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출·퇴근시간 돌봄, 방과 후 돌봄, 실직·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 등

- 한편, 정부는 선도사업 대상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에 학교시설 활용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한 「학교 내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시설·안전관리 가이드라인」(교육부·복지부)을 제공한다.

- 가이드라인에는 학교시설 사용 절차, 공간조성 및 배치,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책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붙임2】 참조

- ▶ (학교시설 사용 절차) 시설 사용 기간(최소 3년 권장), 사용 절차 등을 제시
- ▶ (공간조성 및 배치) 학교 내 돌봄시설 등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 동선 분리 여부는 설치 시설 유형에 따라 구분, 설치 시설 관련 규정상의 기준에 적합하게 공간 배치
- ▶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책임) 사용인의 책임·의무 명확화, 시설물 관리, 보험 가입 등

□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통해 도서관, 주민 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이나 학교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도모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선도사업 선정지역 주요 사업내용
2. 「학교 내 돌봄시설·어린이집 설치 관련 시설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붙임 1 선도사업 선정지역 주요 사업내용

시도	시·군·구	주요 내용	담당자
서울	구로구	다함께 행복한 ‘온(溫)’ 돌봄공동체 만들기 - (지역여건)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고 서민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방과 후 돌봄 수요 높으나 돌봄 공급기관 부족 - (사업내용)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초등학교 걸음으로 15분 안에 24시간 돌봄이 보장되는 돌봄 지원체계 구축·운영	어르신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 이경애 (02-860-2839)
	노원구	아동 친화 돌봄 생태계 구축 및 “우리동네 아이 휴 센터” 조성 - (지역여건) 중위소득 맞벌이가정 비율이 높아 소득에 무관한 돌봄 확충 필요 - (사업내용) 집중돌봄(종일), 시간돌봄(일시), 공간나눔(유유 공간 리모델링), 시간나눔(돌봄기관의 빈시간 활용, 저녁) 등 운영	체육청소년과 팀장 김정환 (02-2116-4418)
	성동구	온 마을 행복돌봄 한올타리 네트워크 - (지역여건) 초등돌봄 대상 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31.1%), 청계천·서울숲 등 자연자원 활용 활발 - (사업내용) 돌봄 포털시스템 구축, 주민 센터, 종교시설, 아파트, 교실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	아동청년과 과장 정은숙 (02-2286-5520)
	성북구	아이를 돌보는 마을, 아동친화도시 성북 - (지역여건) 초등아동 수 및 취약계층 아동 수가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음 - (사업내용) 폐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활용한 돌봄망 확대, 시간별 이원적* 돌봄체계 구축 * 올타리형(방과 후~17시), 등지형(17~21시)	성북아동 청소년센터장 박영주 (02-2241-2456)
대전	서구	온 마을이 함께 돌보는 우리 아이들, 서구 C.C.C(Children Care Center) 구축 사업 - (지역여건) 신도시 개발지역, 공동화로 인한 쇠퇴지역, 농촌지역 등 다양한 권역 존재, 돌봄의 질적 향상 필요 - (사업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도서관) 유휴공간 활용 * 3개소 시범 운영 후 → 23개 행정동 전역으로 확산	기획공보실 담당 홍유표 (042-228-2351)

시도	시·군·구	주요 내용	담당자
경기	시흥시	함께 키우는 시흥아이 (지역여건)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여 권역별(북부, 중부, 남부) 맞춤형 돌봄 공급 필요 * 북부: 중노년층↑, 중부: 아동인구↑, 남부: 외국인·청년↑, 출생률↑ (사업내용) 평생교육도시 사업 등으로 양성한 지역 내 인력(마을강사, 학교강사 등 250여 명) 활용, 자체 개발한 돌봄 모형(8개)을 통한 서비스 확대	기획평가담당관 팀장 정영미 (031-310-3005)
	오산시	오산형 돌봄 “함께자람” (지역여건) 시민 평균연령 36.4세의 젊은 도시, 도시 곳곳 어디든지 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콤팩트 도시 (사업내용) 온라인 포털 추가하여 지역사회 풍부한 돌봄 인프라를 활용한 돌봄 통합지원	평생교육과 팀장 장현주 (031-8036-7520)
충남	홍성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도농복합형 돌봄 생태계 구축 (지역여건) 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 지역과 기존의 농촌지역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도농복합도시(농산어촌 맞벌이 가정 증가 추세) (사업내용) 읍 지역은 교실을 활용, 신도심은 아파트 단지 내 돌봄센터 설치·운영(LH 무상임대), 아이 돌봄지원사업을 통해 틈새돌봄 지원	가정행복과 과장 김경성 (041-630-1520)
전남	광양시	“해아 돌봄 센터” 운영 (지역여건) 도농복합도시(읍 1, 면 6, 동 5)이며 평균연령 39.5세로 전국 대비 젊음 (사업내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돌봄센터 운영 * 돌봄 취약지역(읍면)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 → 도시지역으로 단계적 확산	교육청소년과 과장 박양균 (061-797-2260)

붙임 2

「학교 내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시설·안전 관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목적	▪ 학교 현장이 지역수요에 따라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
적용범위	▪ 학교 내 돌봄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다만, 해당 지역·학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음
학교시설 사용기간 및 절차 등	▪ (사용기간) 최소 3년 이상 권장 ▪ (학교시설 사용절차) 대상 학교 선정(지역단위 협의체 협의 및 대상학교 발굴, 대상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 공유재산 사용허가(사용료, 면적 등) → 용도변경(노유자시설 등)
공간 조성 및 배치	▪ (공간조성) 재학 중인 초등학생, 시설 이용자들의 학습권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조성 ※ 전용 출입구를 설치(보완장치 별도 구비)하고, 이용자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울타리, 실내외 공간 등 조성 ▪ (동선 분리) 공간 분리 운영과는 별도로 설치 시설의 성격에 따라 구분 ※ 어린이집 : 재학 중인 초등학생과 영유아의 동선을 명확히 분리 ※ 돌봄시설 : 학교교육, 방과후활동, 우천 시 편의·안전 등을 고려하여 기존 교사동과 연계·운영 가능 ▪ (공간배치) 내부 환경은 법령, 매뉴얼 등 설치 시설 관련 규정상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운영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 (기본원칙) 관리 주체 이원화에 따라 시설운영, 안전관리 책임 이원화 ▪ (시설공사) 학교시설의 구조적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하고, 공사 중에는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현장 지속 관리 ▪ (시설물 관리) 전기·통신·냉난방 시설은 임의로 신설·변경·증설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사전 승인 필요 ▪ (공공요금 납부) 학교와 분리 납부가 원칙, 개별 검침·계량기 설치 권장 ※ 별도 검침, 계량기 설치 비용은 지자체 부담으로 함 ▪ (보험가입) 사용인은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안전사고 및 각종 배상책임 보험 등에 의무 가입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700억원 규모 특구펀드 조성

- 제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3차-3호 연구개발특구펀드) 결성 -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에 소재한 공공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가칭)제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3차-3호 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양성광, 이하 특구재단)은 이번 펀드 조성으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구펀드를 보다 확대·강화하기로 하였다.
- 특구펀드는 특구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과 권역에 소재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술금융이다.
- 특구내 공공기술사업화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원조달, 데스밸리 극복 등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
- 제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는 지난해 12월 운용사 선정* 후 출자자 모집(모태펀드, 관련 지자체) 등을 진행했으며, 올해 7월부터 70억원 규모로 시작하여 '21년까지 총 7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포스코기술투자(대표 : 정찬형), 케이런벤처스(공동대표 : 권재중, 김진호)

< 출자기관별 연도별 출자계획(안) >

출자자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억원)
과기정통부(특구재단)	20	60	60	60	200
모태펀드	28	84	84	84	280
운용사	5.2	15.6	15.6	15.6	52
지자체	대전TP(대전시)	10	30	30	100
	광주TP(광주시)	3	9	9	30
	대구TP(대구시)	3	9	9	30
	경북TP(경북도, 경산시)	0.8	2.4	2.4	8
합계	70	210	210	210	700

- * 과기정통부(특구재단)의 출자금 200억원 출처 : 2차 특구펀드 회수금의 재투자
- 이번 펀드는 700억 원으로 결성 이후 추가 증액 또는 출자자의 추가 참여를 통해 1,000억 원까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이번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특구에 소재하거나 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사업화의 시현 또는 예정인 기업이다.
- 결성액의 60% 이상을 특구 권역(지자체 단위) 기업에 투자하고, 해당 금액의 50% 이상을 특구 소재 기업에게 우선 투자한다.
- 또한, 출자한 지자체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출자금의 2배 이상을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투자한다.
- 특히, 특구내 기업은 상당수가 중소·벤처·중견기업으로 후속투자 성격임을 감안하여 기업당 10~5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펀드 조성으로 특구내 우수한 기술기반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 "특구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구 기술금융 선순환 생태계 확충을 비롯한 특구 정책과 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특구펀드의 적정규모로의 양적 확대·내실 있는 질적 제고를 위해 '(가칭)3차-4호 특구펀드 조성(19년)'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 펀드운용사 정보

□ 공동 운영사(Co-GP) 체계

- (개념) 2개사 이상의 운용사(GP)가 하나의 팀으로서 투자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역할이나 투자비율에 따라 관리보수 등을 배분
- (장점) 차별화된 경쟁우위(대형투자사의 안정적인 운용 능력과 유한 회사의 기술·현장 중심 신속한 투자활동)에 기반한 시너지 극대화
- (프로세스) 1차·2차 심의로 공동 투자/회수 의사결정 시스템

□ 포스코기술투자(주)

- 펀드 운용 규모 3,594억원의 20년 업력의 한국벤처투자조합

◆ 대표 이사	정찬형
◆ 자본금	1,037억원
◆ 주요 주주	포스코(주), 포항공과대학
◆ 본점 소재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
	○ '97.06 회사 설립 (100억원)
	○ '00.08 서울사무소 개소
◆ 펀드 결성 이력	○ '06.09 포스텍전력전기대중소기업상생협력펀드(285억원)
	○ '10.05 포스텍초기기업펀드 결성(100억원)
	○ '13.12 미래창조 포스코초기기업펀드(300억원)
	○ '15.05 K-Growth 성장사다리 글로벌 펀드(560억원)
	○ '17.09 포스코 고급기술인력창업펀드 결성(252억원)

□ 케이런벤처스(유)

- 펀드 운용 규모 350억원의 국내 1호 엑셀러레이터 겸 유한책임 회사형(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벤처캐피탈

◆ 대표 이사	권재중, 김진호 (각자 대표)
◆ 자본금	6억원
◆ 주요 주주	김정현, 김진호, 권재중(파트너 3인)
◆ 본점 소재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 '15.10 회사설립
◆ 펀드 결성 이력	○ '16.03 케이런 1호 스타트업 투자조합 결성(170억원)
	○ '17.05 케이런 2호 스타트업 투자조합 결성(30억원, TIPS전용)
	○ '17.09 케이런 3호 하이엑스퍼트 투자조합 결성(150억원)

붙임 2 특구펀드 총괄 현황 및 실적

구분		1차 펀드	2차 펀드	3차 펀드		
				(3-1차 펀드)	(3-2차 펀드)	(3-3차 펀드)
펀드 개요	펀드 명칭	대덕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투자펀드	일자리창출 투자펀드 1	충청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펀드	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펀드	일자리창출 투자펀드 2
	주투자 분야	대덕특구내 중소벤처기업에 결성액 60% 이상 투자	특구내 중소벤처기업에 결성액 60% 이상투자	업력 3년 이하 초기기업에 결성액 60% 이상 투자	특구내 기술이전 또는 출자기업에 결성액 60% 이상 투자	특구가 포함된 지자체 권역내 중소벤처기업에 결성액 60% 이상 투자
	운용사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대성창투,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대덕벤처파트너스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포스코기술투자, 케이런벤처스
	기준 수익률	IRR 7%	IRR 8%	IRR 0%	IRR 8%	IRR 5%
	결성일	2006.9월	2012.10월	2016.5월	2017.4월	(2018.7월 예정)
	운용 기간	7년 (투자4+회수3)	8년 (투자4+회수4)	8년 (투자4+회수4)	8년 (투자4+회수4)	8년 (투자4+회수4)
	결성 총액	800억	1,250억	188억	501억	700억원(예정)
펀드 운용 현황	재단 출자금 (자금출처)	400억(50%) (과학기술진흥기금)	300억(24%) (정부출연금 250억 +특구재단 50억)	10억원(5.3%) (TBC운영수익금)	150억원 (29.9%) (2차펀드 회수금)	200억원 (28.6%) (2차펀드 회수금)
	진행 현황	해산완료 (2013.9월)	회수중 (2020. 10월 해산 예정)	투자중 (2024. 5월 해산 예정)	투자중 (2025. 4월 해산 예정)	결성중
	투자 내역 (‘18.5월)	27개사 788억원 투자	51개사 1,186억원 투자	28개사 108.8억원 투자	12개사 116억원 투자	—
	회수금	1,294억원	809.4억 (‘20년 10월까지 회수진행)	-	—	—
	고용 성과	758명	532명	123명	82명	—

생활 속 인문 확산을 위한 지역 인문 활동가 모집

- 전국 지역 문화기반시설 65곳 선정, 인문 전공자 130명 인문 활동 지원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류지호)과 함께 ‘인문 활동가 양성·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할 지역 문화기반시설 65곳을 선정하고 이곳에서 활동할 지역 인문 활동가 130명을 7월 10일(화)까지 모집한다.

‘인문 활동가 양성·파견 사업’은 인문 분야를 전공한 인력들을 지역의 문화시설 등에 파견해 교육과 강연, 인문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다양한 인문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단기 강연, 저명강사 위주의 인문 활동을 다양화해 미취업 인문학 전공자에게 ‘정감다리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전문성 있는 활동가를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도 ‘인문 활동가 양성·파견 사업’은 생활 속 인문 확산과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서원, 향교 등 생활권 기반 지역 문화시설 65곳을 먼저 선정하고, 해당 시설이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문전공자를 직접 모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각 시설이 선발한 인문 활동가는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정기간의 교육(3일/1차 7. 19.~21., 2차 7. 22.~24.)을 거쳐 각 시설에서 6개월 동안(‘18년 8월~‘19년 1월) 활동하게 되며 월간 활동시간을 충족하면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인문 활동 유형은 ▲ 인문 분야의 교육, 강의, 강연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교육·강연형과 ▲ 인문 관련 동아리 구성·운영, 인문 및 인문융합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획·운영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 교육·강연형은 미취업 상태의 인문계열 석·박사를 자격요건으로 월 20시간 한도로 활동을 지원한다. ▲ 기획·운영형은 미취업 상태의 인문 및 인문융합계열 학사 이상의 학력(학사·석사·박사 학위 중 인문계열 전공이 하나 이상이어야 함.)을 자격요건으로 월 30시간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문화기반시설에서 인문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미취업 상태의 인문 전공자는 해당 거주 지역에 있는 시설(붙임 1)에 7월 10일(화)까지 인문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과 지원 내역 등 자세한 모집요강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www.kp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사업에 참여한 인문 활동가들이 지역에 인문 가치를 확산하는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한다. 창의, 융합, 소통 등을 주제로 인문을 예술, 과학, 기술, 관광 등 다른 분야와 접목하는 창의융합인문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지역의 청년 인문·문화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7월 중) 이와 함께 2017년에 참여한 인문 활동가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심화하고 활동가 간의 연계망(네트워크)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자율 및 공동기획 프로젝트를 공모해 인문 활동 및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을 통해 미취업 인문 전공자들에게 지역 기반 인문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인문 인력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주민 생활권을 토대로 한 자생적 인문 활동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8년 인문 활동가 활동 지원 문화기반시설 선정 현황

2. 2018년 인문 활동가 모집 요강

신성장 곤충산업, 사육농가 '15년 대비 3배 성장

- 2017 곤충양잠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 육성정책 수립과 업계·학계의 유통·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곤충·양잠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17년말 곤충 농가·기업은 2,136개소로 '16년 1,261농가 대비 69.4%가 늘어났다.
 - 곤충별 신고자와 판매액은 흰점박이꽃무지 1,195개소(166억원), 장수풍뎅이 415개소(24억원), 귀뚜라미 384개소(56억원), 갈색거저리 282개소(24억원), 사슴벌레 158개소(12억원)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01개소, 경북 398개소, 경남 238개 순이었다.
 - 곤충 농가·기업은 2015년 724개소, 2016년 1,261개소, 2017년 2,136개소로 크게 늘고 있으며,
 - 이는 '16년까지 귀뚜라미, 메뚜기, 갈색거저리 애벌레,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등 7종의 곤충이 식용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지정되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17~'19년), 곤충유통사업단(예천),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등 곤충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 또한, 사육사 형태는 비닐하우스가 34%, 판넬 32%, 일반사육사(작물재배사, 창고) 13%, 콘크리트 10%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 비닐하우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밖에 곤충 산업 인프라로써 곤충 관련제품 판매장은 전국 322개소이며, 곤충 생태공원은 13개소, 체험학습장은 87개소로 조사 되었다.
-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곤충농가의 판매 및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농가(기업)의 경우 유통과 연계하여 생산을 늘려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 한편, 양잠농가는 총 4,917호(누에사육 735호, 오디재배 4,182호)로 '16년 5,661호 대비 13.1%가 감소하였다.
 - 더불어 뽕밭 면적은 누에사육용이 480ha 오디재배용이 1,309ha이며, 누에 사육주산지는 경북(332호, 전국의 45%), 오디 주산지는 전북(2,517호, 전국 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번 조사 결과 양잠농가수와 재배면적이 감소한 원인은 양잠농가의 59%가 61세 이상으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일부 농가가 타작물로 전환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말 기준 곤충 생산·가공·유통업을 신고한 농가(기업) 및 양잠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를 통해 조사하는 행정조사이며,
 -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곤충산업 및 양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지자체, 협회, 기업, 연구소 등에 제공하여 유통활성화, 제품개발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2017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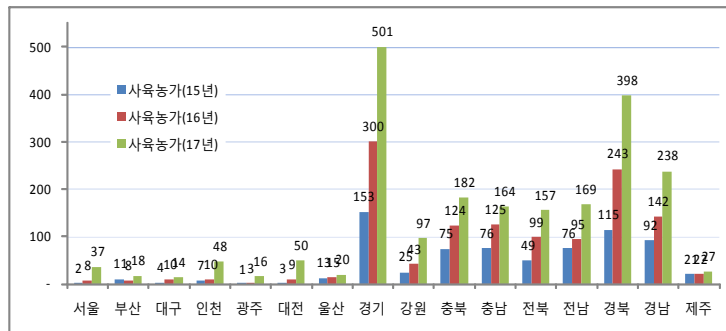
□ (사육 농가) '17년 곤충사육농가는 2,136('16년 1,261농가, 69.4% ↑), 종사자는 3,194명('16년 1,821명, 75.4% ↑)으로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

○ 지역별 신고 현황은 경기 501호 > 경북 398호 > 경남 238호 순

○ 곤충별 신고 현황은 흰점박이꽃무지 1,195호 > 장수풍뎅이 415호 > 귀뚜라미 384호 > 갈색거저리 282호 > 사슴벌레 158호 > 동애등에 51호 > 나비 21호 > 반딧불이 5호 > 기타 67호

* '16년 : 꽃무지 814호 > 장수풍뎅이 365 > 갈색거저리 242 > 사슴벌레 109 > 귀뚜라미 9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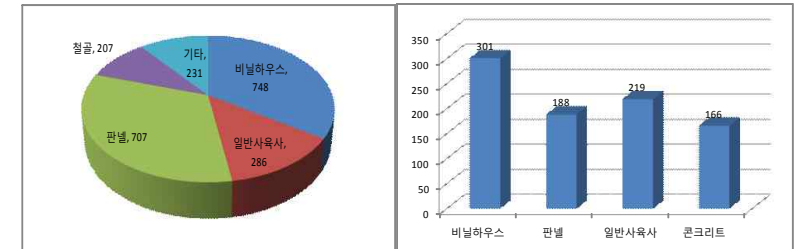
* 귀뚜라미는 번식이 빠르고, 사육하기가 쉬워 '16년대비 사육농가와 판매액이 크게 증가(각각 317%, 211%) 함 (특히 경기도 사육농가 '16. 8 → '17. 133)



□ (곤충사육사 형태) 비닐하우스(748개소, 34.3%) > 판넬(707개소, 32.4%) > 일반사육사(286개소, 13.1%) > 콘크리트(207개소, 9.5%) > 기타(231개소, 10.6%)순이며, 평균 사육규모는 비닐하우스 301㎡, 판넬 188㎡, 일반사육사 219㎡, 콘크리트 166㎡

○ '16년(비닐 38%, 판넬 27%) 비해 비닐하우스가 약간 줄어 들었음

* 일반사육사 : 작물재배사, 창고, 축사/ 기타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 사육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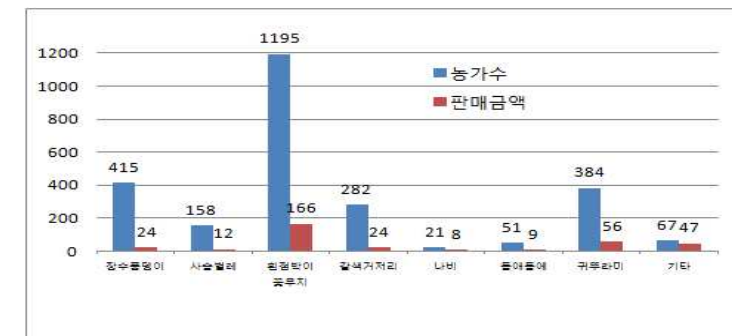
< 평균 사육 규모(단위㎡) >

□ (곤충별 판매액) 흰점박이꽃무지 166억원 > 귀뚜라미 56억원 > 장수풍뎅이 24억원, 갈색거저리 24억원 > 사슴벌레 12억원 > 동애등에 9억원 등

* '16년 : 흰점박이꽃무지 88억원 > 장수풍뎅이 61 > 귀뚜라미 18 > 사슴벌레 13 > 갈색거저리 13 등

○ 판매 매장은 전국 322개소로 대형마트 258개소, 독립매장 64개소이며 수도권 대형마트에서 주로 판매(140개소, 43.4%)됨

* 학습 · 애완용 곤충은 전국의 판매 매장, 식용곤충은 직거래 판매



□ (인프라) 곤충연구소 15개소, 생태공원 13개소, 체험학습장 87개소이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 (지역행사) 곤충축제는 11회('16년 17회), 대략 124만명('16년 172만명) 참여

□ (지자체 재정지원) 전체 87억원(국고지원제외)이며, 전북 24억원, 충남 18억원, 경북 17억원, 경기 7억원 순으로 '16년(54억원) 대비 61%가 증가 됨

수도권대기환경청, 생활밀착형 대기환경개선 사업 공모

- 수도권 내 민간단체 대상으로 대기개선 활동 사업 공모,
우수과제 최대 5개 선정하여 사업지원금 총 2,100만 원 지원 -

-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수도권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생활밀착형 대기환경개선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 사업은 민간단체의 역량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 공모 주제는 '수도권 푸른 하늘을 위한 생활밀착형 실천 해결책 (솔루션)'으로, 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 제출된 과제는 △사업내용 △단체 역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최대 5개 사업이 선정되고 사업비 총 2,1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 신청은 대기환경개선에 관심 있는 수도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 신청서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 또는 환경보전협회 누리집(www.epa.or.kr)에 게재된 서식을 내려 받아 7월 13일까지 환경보전협회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 제출처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환경보전협회 8층 홍보사업부 담당자 앞
- ☐ 공모 선정 결과는 7월 25일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환경보전협회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031-481-1327)에 문의하면 된다.

- ☐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대기환경 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대기환경개선 대책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실천적이고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므로 관심 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공모 포스터 끝.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생활밀착형 대기환경개선 사업 공모

접수기간 : 2018. 6. 25(월) ~ 7. 13(금)

모집내용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생활 밀착형 과제 수행

- 공모주제 : 수도권 푸른 하늘을 위한 생활밀착형 실천 솔루션
 - 지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대기개선활동 발굴
 - 대기오염 지역현안 및 시각지대 조사, 관리방안 모색
 - 국민동참 캠페인 추진 및 대국민 홍보방안 발굴 등

모집대상 최대 5개 단체

- 수도권 지역 내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법인

※ 접수 결과 및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모집 대상 단체 수 변동 가능

모집방법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장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환경보전협회 8층 홍보사업부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 사업계획서(소요예산 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단체소개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서류를 담은 CD 1장(별도제출)

※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 또는
환경보전협회 누리집(<http://www.epa.or.kr>) 참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 APEC 청년고용증진 포럼 개최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6일부터 양일간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서울 영등포구)에서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원국 간 청년고용정책과 직업훈련기술 향상 방안 등을 공유하는 ‘APEC 청년고용증진 포럼’을 개최한다.
- 포럼에는 APEC 회원국 고용·교육 분야 정책담당자와 국내·외 청년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해,
 - APEC 회원국의 ▲국가별 청년고용정책 ▲직업훈련기술 향상 제도 및 우수사례 ▲상호기술인정을 통한 노동이동성 증진 방안 ▲고용증진을 위한 초국가적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사례 공유와 토론을 진행한다.
- 첫 번째 세션인 ‘국가별 청년고용정책’에서는 올해 2월부터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고용 현황 및 정책 우수사례’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 패널로 참석한 야스오 아리가(Yasuo Ariga) 일본 노동후생성 자문관은 자국 내 프리터(Freeter)*에 대한 고용지원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프리터(Freeter) : 정규 직업을 갖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인 일을 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청년

-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호주의 ‘청년 직업훈련기술 향상 제도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 페타 아버클(Peta Arbuckle) 주일호주대사관 참사관은 호주의 청년고용 현황과 함께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청년 직업훈련 기술 향상 전략을 소개한다.
- ‘상호기술인정을 통한 노동이동성 증진방안’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글로벌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한국과 호주, 필리핀의 자격 프레임워크(Framework) 소개가 이어진다.
- 마지막 세션에서는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초국가적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와 국가 간 공감대 형성을,
- 특별 세션으로 마련된 ‘청년고용을 바라보는 한국청년들의 시각’에서는 각 국 청년들을 대표해 한국 청년들이 구직시장에서 갖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갖는다.
-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포럼을 통해 범국가적 화두인 청년고용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함께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우리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해외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10

여성가족부

여성의 경력단절, 해결방안을 찾습니다.

- 여성 경력잇기 문화 정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기혼 여성 두 명 중 한 명 꼴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현실과 해법을 공유하기 위해 모든 여성이 경력단절 우려 없이 육아를 병행하며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성의 경력잇기 문화 정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 공모주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생각, 경력을 지속 이어나갈 수 있는 기업 또는 사회문화에 관한 생각 등이며, 이를 쉽고 명확하게 표현한 네이밍(캠페인명·슬로건)과 디자인(심볼)이다.
 -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6월27(수)부터 7월31(화)까지 중앙새일지원센터(newcentralhq@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 이번 공모전은 현재 시·도별 새일센터(15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력단절예방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 할 수 있는 네이밍과 디자인을 발굴하는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것이다.
- *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노무·심리 상담, 멘토링,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직장 교육 및 워크샵,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 여성가족부는 공모주제에 대한 **적합성, 아이디어 창의성 및 활용성**을 고려하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네이밍·디자인 분야별로 각각 **최우수 1명, 우수 1명, 총 4명** 등 수상작을 선정, 8월8일(수) 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saeil.mogef.go.kr) 및 블로그(blog.naver.com/newcentralhq)에 발표한다.

- 선정된 수상작은 새일센터 경력단절 예방사업 추진 및 온·오프라인 경력단절예방 캠페인 등에 활용된다.

□ 이진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서는 여성일자리 정책 강화 및 경력유지 지원과 함께, 경력단절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사업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여성의 경력잇기 문화정착 캠페인 포스터 1부. (시안 최종 수정 중)

붙임 1 여성의 경력 잇기 문화정착 캠페인 포스터

여성의 경력잇기 문화캠페인 네이밍&디자인 공모전

캠페인에 사용될 네이밍(캠페인 명&슬로건), 디자인(심볼)을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주세요!

여성의 경력잇기 문화캠페인이란?
 '결혼, 출산 이후에도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및 기업문화를 만들자'의 취지로 진행되는 캠페인

공모주제 ※네이밍과 디자인은 다음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함

- 여성의 경력단절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여성의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업 또는 사회문제에 관한 생각

공모자격 제한없음

공모분야 ※중복지원 가능
 [네이밍]캠페인명&슬로건
 [디자인]심볼

공모일정
 기간 | 2018년 6월 27일(수)~7월31일(화) 지정
 발표 | 2018년 8월 8일(수)
 여성새로일하기 홈페이지 및 블로그 공지
 (개별 통보 예정)

접수방법
 이메일(newcentralhq@naver.com)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newcentralhq)
 문의 : 02-6954-7334

시상내역
 네이밍 | 최우수 1명(장관상, 100만원), 우수 1명(50만원)
 디자인 | 최우수 1명(장관상, 100만원), 우수 1명(50만원)

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

-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기반시설 46종으로 개편-

□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8. 6. 28. ~ 8. 7.) 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기반시설 체계 개편(통합·신설 등) 위해 개정(‘17. 12. 26.)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차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 시설 체계 정비(현 52종 → 46종)

○ **기반시설**은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제도 도입(‘62년) 이후 과도하게 **세분화**(최초 28종 → 현재 52종)되고 일부 유사한 시설이 있다.

- 이에 기반시설 목적·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하는 한편, 빗물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기반시설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신설했다.

기반시설 통합·정비(안)

현 행	개 선	비 고
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시설로 통합	법률 개정(‘17.12)에 따른 시행령 개정
화장시설 + 공동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장례식장	장사시설로 통합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명칭 변경	
-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신설	시행령 개정
하천 + 운하	하천으로 통합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삭제	시행령 개정

※ 7종 52개 시설(법 27개, 시행령 25개) → 7종 46개 시설(법 25개, 시행령 21개)로 개편

-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를 통해 수요자인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②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 연장 추진

○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종전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 등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40%→20%)됨에 따라

- 기존 공장은 용도·밀도 등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부지 확장 및 증·개축이 제한**되어 근로환경 개선도 어려운 실정이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까지 **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도록 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명확화

○ 현재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내 20%까지 포함할 수 있고, ‘이미 개발된 토지’는 추가로 포함(최대 50%)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그러나 ‘이미 개발된 토지’의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현행 법령의 취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여,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 비율 제한 예외 대상에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준보전산지에 한함)를 명확히 규정했다.

④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필요사항 규정

- 기초조사정보체계를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통합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 전반의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정보관리체계**로 적용하도록 했다.

* 도시계획정보체계(UPI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포함하는 상위 정보체계로 기초조사정보체계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IS)에 포함하여 구축·운영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 “기존 공장은 추가적인 부지 확보 없이도 설비 증설이 가능하게 돼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8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8, 3711, 팩스 044-201-5569)

12

해양수산부

어촌 재생·해양관광 활성화로 어촌 혁신성장 이끈다

- 해수부, 「어촌뉴딜 300」 추진 계획 발표... 어촌의 지속발전 도모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 추진 계획을 6월 28일(목) 발표하였다.

‘어촌뉴딜 300’이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300여 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어촌 주민의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 핵심시설인 어항·포구는 그간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낙후되어 주민 불편 및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주여건의 악화는 어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空洞化)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어촌에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통 불편 및 낙후된 관광 인프라 등으로 어촌의 성장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이 기항하는 소규모 항포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이원적·단절적으로 추진되던 기존의 어촌·어항 사업을 통합·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어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어촌뉴딜 300’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혁신 어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라는 3대 추진방안과 이와 관련된 세부사업 추진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추진방안 1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어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선 여객선이 안전하게 입·출항 할 수 있고 승객도 안전하게 승·하선 할 수 있는 접안시설(선착장, 소형선 부두 등)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여객선의 현대화 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가 많고 안전사고가 빈번한 항포구에 안전난간, 구조사다리, 지능형 CCTV(실시간 사고감지 및 구조신고) 등 안전시설을 설치·보강한다. 또한, 여객선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등)을 개선하고, 항공·고속버스 등과 유사한 모바일 승선권 및 여객선 승선 자동 확인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여객 이용 시 편의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추진방안 2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어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해안선을 따라 권역별로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별로 확산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은 인근 연안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관광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레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해양레저 교육·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전국의 연안과 섬을 해양레저 활동으로 종주할 수 있도록 주요 레저 관광지를 연결하는 U자형 바다둘레길 관광코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맞춤형 사업유형을 선정하고, 지역별 특화사업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방안 3 어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 개발 이후에도 어촌지역의 자생력·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체감형 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별 ‘어촌뉴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협의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속적·체계적인 어촌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특화지원센터, 어촌6차산업 등의 확대를 통해 과거 생산 위주였던 어촌의 산업구조를 생산부터 유통·가공·체험·관광까지 포함된 융복합 구조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귀어인구의 정착을 위한 창업·주택마련 자금 지원과 귀어학교 확충, 청년 창업 지원 등의 인구유입 정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하반기 사업 대상지와 그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연차별 개발계획(‘19~’22)을 수립하여, 현 정부 내 어촌뉴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어촌뉴딜300사업의 청사진이 드디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균형발전 실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